

가난, 자유, 인구:

19세기 프랑스 근대 국가와 경제학 지식의 공생산¹

오경환†

1. 서론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경제학의 학문적 목적은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이 배분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탈역사화되고 자유주의 경제학의 계보학에 맞추어진 휘그적 정의이다. 이 글은 프랑스 19세기 경제학 지식의 탄생과 변천에 대해 학설사적 접근이 아닌 역사적이며 담론적 접근을 수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지성사와 학설사적 접근은 경제학의 역사를 자기 충족적이며 목적론적인 이론 보완의 역사로 만들어 왔다. 일반적인 과학사 내부에서 사회 과학의 역사가 주변화된 사정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학사가들 대부분에게 사회 과학의 과학성(scientificity)은 의심스러운 수밖에 없었다. 구성주의적 전환 이후에도 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론적·방법론적 차이나 심지어 위계적 인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없어지지 않았다.²⁾ 따라서 과학사의 이론적 작업 대부분이 사회 과학사로 유입되지

¹ 이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 2014년 2학기 자유 과제 연구비(과제 번호: 2014-2-11-015)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khmyslander@hotmail.com

² 이는 사회 과학의 출발 지점에서부터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다. 흄(David Hume)의 경우 사회 과학이 갖는 인식론적 불확실성과 자연 과학의 인식론적 확실성을 회의주의적 입장 안에서 해소하여 사회과학의 인식론적 기초를 닦았다[Keith Baker, *Condorcet: From Natural Philosophy to Social Mathema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ch. 2.]. 하지만 이런 기원이 과학의 공통적 기초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은 아니다. 콩트(Auguste Comte)는 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 간의 과학성에 의한 위계 관계를 설정하였고 이 위계는 여전히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Theodore Porter & Dorothy Ross, "Introduction: Writing the History of Social Science," *The Cambridge History of Modern Science* vol. 7: *The Modern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6-7.

못하거나 자연 과학과의 인접 학문—통계학, 심리학 등—에 국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학문 내부의 학설사 전통은 전문 역사가의 맥락적 작업에 지속적인 방해물이 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학의 역사는 경제학 지식-실천(knowledge-practice)의 역사로 해체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학설사에서 지식 생산과 지식의 사회적 실천의 상호 영향을 연구하는 담론사(discursive history)로 이행하여야 한다.³⁾

이런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것은 푸코(Michel Foucault)의 선구적인 작업이다. 그는 경제학 지식의 탄생에 통치성(governmentality)과 근대 국가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우연성(contingencies) 안에서 해석한다. 중세 보편성의 해체는 그 자리를 대신할 세 가지 요소, 즉 자연 법(칙)과 주권, 통치 합리성(governmental rationality)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 세 요소의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결합은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혹은 부르게 된—제도적 집합 추상을 만들어 냈다.⁴⁾ 이 세 요소의 결합이 만들어낸 최초의 도구적 지식 체계가 국가 이성(raison d'État)이었다면 “한 세기 뒤에” 등장한 “새로운 종파”는 경제학 지식이었다. 경제학 지식은 경제 현상이 가진 “사회적 자연성”에 대한 내치(內治)를 목표로 하며 국가 “통치술”의 외부에 존재하게 된다. 이 경제학 지식의 등장은 “자유”의 개념을 단순히 사법적 권리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통치성 자체에 불가결한 요소”로 만들었다.⁵⁾ 푸코의 이러한 통찰은 자유주의/자본주의적 자유의 개념이 근대 국가의 탄생과 깊숙하게 결부된 맥락을 드러낼 뿐 아니라 경제학이라는 지식 체계(knowledge regime)가 이에 얼마나 핵심적이었나를 잘 보여 준다.

하지만 통치성의 구현으로서의 근대 국가와 경제학 지식 사이의 구체적 상호 영향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푸코 자신이 통치성에 대한 탐구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경험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하지만 19세기 초중반에 등장한 “사회적 문제(la question sociale)”와 이에 따른 “가난”의 문제에 대한 사회 과학적 접근은 바로 이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사회적 배분은 필연적으로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제기한다. □ 인구론□으로 유명한 맬서스(Thomas Malthus)에 의해 가난이 자연화(naturalize)되고 “일반적인 법칙”이 이렇게 자연화된 경제 현상에 대한 특정한 시각에서 도출되는 일련의 과정은 프랑스 경제학 지식과 근대 국가 형성 과정 모두에

3) 담론사의 개념은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례로 앙쥬노(Marc Angenot)로 대표되는 담론사는 기존 학설사의 확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필자는 담론사의 개념을 푸코가 □ 지식의 고고학□에서 지적인 담론적 실천과 비담론적 실천 사이의 복잡한 관계의 분석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Marc Angenot, *La Propagande socialiste: six essais d'analyse du discours* (Montréal: Éditions Balzac, 1996); Michel Foucault,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Pantheon, 1972), 68.

4) “국가는 통치의 돌발 사건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도구는 통치기 아닙니다. 아무튼 국가는 통치성의 돌발 사건입니다.” 미셸 푸코, 오토트랑 옮김, □ 안전, 통치, 인구 □ (난장, 2011), 346.

5) 같은 책, 471, 474-475, 478.

6) 푸코는 □ 생명정치의 탄생 □ (난장, 2011)에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고 이에 통치성 자체에 대한 탐구를 중지한다.

핵심적이었다. 그런데 프랑스 지식인들은 기술적이며 즉자적인 표현인 빈곤/가난 (pauvreté; misère) 대신 “사회적 문제” 라는 새로운 문제 의식을 통해 그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한 특정한 이해 방식을 구축했다. 즉 경제 현상이라고 이해되는 가난이라는 현상은 이제 이 새로운 문제화 방식을 통해 “사회” 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현상으로 변화한 것이다.⁷⁾

“사회적 문제” 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적” 이라는 발생학적으로 모호한 범주로 변주하는, 즉 계급적인 문제를 가공의 범주를 통해 희석시키려는 통치 기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사회적 문제” 를 대단히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언술 행위로 보는 관점이며 사회 현상 자체의 가독성 (legibility)에 내포된 표준적인 기호학적 문제, 즉 사회 현상의 언어적 “재현 (representation)” 의 한계를 무시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적 문제” 가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실천은 근대 국가에 의해 매개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따라서 가난이라는 현상이 “사회적” 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가난이 특정한 정치·경제적인 맥락, 즉 근대 국가라는 특정한 통치성의 국면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프랑스에서의 경제학 지식은 가난을 다루는 방식으로서 “사회적 문제” 의 발명과 더불어 전개되어 왔다. 이 글의 일차적 목표는 이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사회적 문제” 가 생산하는 지식이 근대 국가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1789년 대혁명에서 7월 혁명에 이르는 시기를 하나로, 7월 왕정과 1848년 혁명, 제2제정 시기를 다른 하나의 시기로, 1848년 혁명에서 제3 공화국까지를 또 다른 시기로 묶는다. 물론 이 구분은 대단히 자의적인 것이지만 근대 국가의 발전 서사라는 측면에서 나름 의미를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각 시기 경제학과 사회 과학 지식이 근대 국가와 맺는 복잡한 관계의 양상, 특히 공생산 (co-production)을 보여주려 한다.⁸⁾

2. 대혁명과 사회적 문제의 탄생

7) 동줄로 (Jacques Donzelot)와 프레이저 (Nancy Fraser)는 “사회적” 이라는 범주가 자연적인 경제 현상 외부에 가난이라는 문제를 위치 짓는, 즉 정치적 혹은 경제적 위험성이 중화되는 범주적 공간으로 발명되었다고 본다. 비슷한 견해는 전통적인 사회학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Jacques Donzelot, *L'Invention du Social: Essai sur le déclin des passions politiques* (Paris: Fayard, 1984); Nancy Fraser, *Unruly Practices: Power, Discourse, and Gender in Contemporary Social Theo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9), 129-138; Robert Nisbet,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Rise of Sociology in Franc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9:2 (1943), 156-164.

8) Sheila Jasanoff, “The Idiom of Co-Production,” *idem., ed.,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the Social Order* (London: Routledge, 2004), 1-13.

1789년 혁명을 근대 국민 국가의 출발점으로 보는 견해는 이미 널리 퍼져 있다.⁹⁾ 혁명에 최소한 그 형식적인 기원을 두고 있는 시민권의 탄생과 대규모 징병(*levée en masse*), 민족주의 등은 모두 근대 국민 국가 형성에 핵심적인 요소였다. 토크빌의 고전적인 저작이 설명하는 것처럼 혁명의 핵심적인 결과는 균질적인 시민에 대한 행정의 확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주의의 주장처럼 혁명이 주로 정치적 문제(*la question politique*)에 천착했던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¹⁰⁾ 혁명이 제기한 “정치적 문제”는 최소한 시민권의 확보를 통해 정치적 평등을 정립하고 “절대적인 민주주의”의 실험을 전개하였다.¹¹⁾ 물론 이 정치적 실험은 나폴레옹과 왕정 복고, 7월 왕정 등을 통해 순화되고 기능적이며 타협적인 민주주의로 진화하게 되었다. 이 정치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경제학 지식의 지위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프로카치(*Giovanna Procacci*)는 19세기 프랑스 정치 경제학에 대한 표준적인 저작에서 바로 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천착에서부터 가난에 대한 과학이 특별한 시사성을 얻었다고 본다. 1789년의 혁명은 불완전하게나마 정치적 권리를 획득한 대중에게 경제적 평등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의 폭력적인 맥락에서 이런 시민들의 존재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첨예하게 정치화된 혁명이라는 맥락에서 이 괴리를 내면화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기제가 절실히 필요해졌다. 도덕화(*moralization*)의 전략, 즉 궁극적으로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하는 전략이 그중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혁명 과정과 이후 대두되었다.¹²⁾ 그 중에서도 선견지명(*prévoyance*; *foresight*)의 개념은 성실하고 저축을 하며 계산하는 합리적인 주체로서의 이상적인 노동자/시민의 모습을 구축한다. 분명 이 전략은 양날의 칼로 기능했다. 이 전략을 통해 국가가 그 구성원의 물질적 생존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주장이나 경제 조직 자체, 즉 당시 떠오르던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경제적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명 이후 7월 왕정에

9) Gianfranco Poggi, “The Nineteenth-Century Constitutional State” *idem.*, ed.,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A Sociological Introduc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8); Eric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Roger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al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10) 가장 대표적으로 푸레(François Furet)의 *Penser la Révolution* (Paris: Gallimard, 1979)를 들 수 있다. 물론 최근 1789년 혁명과 자본주의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저작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John Shovlin, *The Political Economy of Virtue: Luxury, Patriotism, and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Paul Cheney, *Revolutionary Commerce: Globalization and the French Monarch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Rebecca Spang, *Stuff and Money in the Time of the French Revolu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11) Pierre Rosanvallon, *La Démocratie inachevée: Histoire de la Souveraineté du Peuple en France* (Paris: Gallimard, 2000), 84.

12) Procacci, *Gouverner la Misère: La Question sociale en France, 1789-1848* (Paris: Seuil, 1993).

이르는 시기까지 전개되었느냐는 독립적인 문제이다. 프로카치는 “사회적 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의 문제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빈약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1848년 이전까지 “사회적 문제”가 우연을 제외하고는 사회 과학적 용어로 사용된 예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사회적 문제,” 또 더 중요하게는 그 문제가 상정하는 답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미와 전략을 담보한 역사적 개연성(historical contingencies)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핵심적이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 기간과 그 이후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면에서 1790년 1월 21일 국민 의회(l'Assemblée Nationale)의 결의로 결성된 “떠돌이 위원회(Comité de Mendicité)”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위원회는 그 명칭이 암시하는 범위를 훌쩍 넘어 이후 두 세기 동안의 프랑스 정치 경제학의 과제를 정의했다.

각각의 구성원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그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보조는 일종의 자선으로 볼 수 없다. ... 이는 빈곤(pauvreté)에 처하지 않은 모든 이의 엄정하고도 필수적인 의무(devoir)이며 ... 사회의 침해할 수 없고 신성한 빚(dette)이다.¹³⁾

이 역사적인 문서는 두 가지 대립될 수 있는 층위에서 가난에 대한 지식 생산에 중요한 전제를 도입했다. 먼저 사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도입은 혁명기 프랑스 근대 국가의 시민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였다. 혁명이 정치적으로 상상되었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이해 역시 정치적인 해결책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서는 모든 시민은 생존권(droit à vivre)을 가지고 있고 노동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회는 생존권을 보장하던가 노동 자체를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생존권이 보통 두 범주, 사회 보조권(droit à secours)과 노동권(droit au travail)으로 나뉘어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통치성이 매개하는 국가와 경제학 지식 간의 관계가 부재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조차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틀 안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회적 빚”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 노동(travail)은 필수적인 생존의 방법이 되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자(le pauvre valide)”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전제는 “가난(misère)이 모든 범죄와 악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조는 가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¹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과 빈곤 사이의 분명한 변별이다. 가난은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으로 재정되고 있다: “혈기

13) Duc de la Rochefoucauld-Liancourt, *Plan de Travail du Comité* (Paris: Imprimerie Nationale, 1790), 5.

14) Ibid., 10.

왕성하고 건강하며 자신의 두 팔로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빈곤하다; 하지만 그는 노동이 제공되는 한 가난하지는 않다.”¹⁵⁾ 이 정의는 가난과 노동을 양가적인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의 기틀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층위에서 살펴볼 때 왕정 복고기 프랑스 경제학을 주도한 세(Jean-Baptiste Say)가 혁명 직후 영국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중화를 주도한 사실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 방임”의 개념을 높은 수준으로 추구한 세는 정치 경제학을 사회체와 그 구성물, 그 구성원에 관한 단독적인 과학으로 재정립하려 하면서 사법적이거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가난의 문제를 분리하려 하였다.¹⁶⁾ 이 재정립은 먼저 프랑스에서 벌어진 복잡한 학제간 지식 투쟁에서 경제학 지식에 특권적인 “과학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가 새로운 경제학을 들고 나오게 된 데에는 경제학 지식 내부에서 시스몽디(Simone de Sismondi)를 중심으로 경제적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력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회 과학 지식과의 경합이 치열했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¹⁷⁾

나아가 영국적 자유주의 경제학의 도입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 선언이었다. 이제 경제학 지식의 체계는 단순히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 현상 자체가 시장과 개인이라는 맥락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 체계는 노동권이나 사회 보조권과 같은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가난을 경제학적인 지식의 자연법 안으로 포섭하려 했다. 세가 주장한 경제학의 기본적인 분석틀이 개인과 개인의 행동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학 지식의 유입을 통한 이 학제적 변환은 가난에 대한 행정적 수요나 관리의 욕구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는 경제학이라는 학제가 “사회적 문제”를 사회나 국가, 공동체의 통치(governance)의 영역에서 분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푸코의 개념을 따르자면 가난은 직접적인 통치의 영역이 아니라 통치성(governmentality)의 영역이 된

15) Ibid., 13.

16) Jean-Baptiste Say, *Cours complet d' économie politique pratique*, Tome 1, 2nd edition (Paris: Guillaumin, 1840), 25-26. 아마도 이런 경향의 극단적인 완성은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의 “경제적 조화”(harmonies économiques)일 것이다. Frédéric Bastiat, *Œuvres Complètes* Tome Sixième: *Harmonies Économiques* (Paris: Guillaumin, 1864).

17) 특히 생시몽(Claude Henri de Rouvroy, comte de Saint-Simon)이나 콩트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학”이나 캐틀레(Adolphe Quetelet)를 중심으로 하는 통계학적 접근은 경제학 지식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세는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회 과학 방법론에 적대적이었다. 세는 자연 과학과 비슷한 수준의 확실성을 획득하는 것이 사회 과학에서도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이 믿음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제는 통계적 근사치가 아니라 법적 확실성이라고 보았다. 이에 관해서는 소웰(Thomas Sowell)의 *Say's Law: An Historic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참조. 생시몽과 콩트사이의 초기 협업과 이의 사회 과학적 의미에 관해서는 구이에(Henri Gouhier)의 고전적인 저작인 *La Jeunesse d'Auguste Comte et la Formation du Positivisme* (Paris: Vrin, 1941)이 여전히 표준적이다. 초기 통계학적 사회 과학에 관해서는 해킹(Ian Hacking)의 *The Taming of Ch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과 데로시에르(Alain Desrosières)의 *La politique des grands nombres: Histoire de la raison statistique* (Paris: La Découverte, 1993) 참조.

것이다.¹⁸⁾

그렇다고 세를 비롯한 일군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프랑스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한 것은 아니었다. 세 이후 자유주의 경제학의 이념 성향을 계승한 $\square$ 경제학 저널(Journal des économistes) $\square$ 은 출판업자 기요맹(Gilbert Guillaumin)의 호의로 출판이 지속되었을 뿐 1848년 혁명기까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¹⁹⁾ 프랑스에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사회 과학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 한 역사—심지어 현재를 포함하여—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당대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으로서 자유주의 경제학 지식이 갖는 이 아이러니의 원인은 자유주의 경제학과 통치성이 맺고 있는 대단히 복잡한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가 통치성의 원리로 기능할 때와 이데올로기적인 경제학 지식으로 표현될 때에는 넓은 간극이 존재한다. 자유주의적 경제학 지식이 사회적 헤게모니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근대 국가의 통치 원리로서의 통치성과 배치되거나 다양한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푸코는 “시장의 자유를 사교할 때에는 공법의 문제, 즉 공권력에 의한 제한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야 했다” 고 정리한다.²⁰⁾ 이 시장의 조절, 즉 “공권력에 의한 제한”이라는 문제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즉 근대 국가는 왕정 복고기에 거의 갖추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혁명 이후 7월 왕정에 이르는 기간은 자유주의 경제학 지식도 통치성도 완전히 근대 국가에 착근되지 않았으며 근대 국가 자체도 취약했던 기간으로 보인다.

3. 이성의 주권과 기조의 7월 왕정

프랑스에서 근대 국가는 대혁명이 제시했던 보편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실현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었다. 대혁명이 제시한 “인권”은 보편성의 중요한 기제로—그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엄존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인권으로부터 출발해 구상된 자유”와 “피통치자의 독립으로부터 출발해 지각된 자유라는 절대적으로 이질적인 두 개념”에 대한 푸코의 지적은 중요하다. 푸코는 자유를 주권에서부터 연역된 인권이라는 층위와 “통치성과 관련된 피 통치자의 독립 표명”과 구분하면서 이들 간의 “변증법의 논리를 대체하기 위해 … 전략의 논리”가 개입하였다고 주장한다.²¹⁾ 결국 두 이질적인 층위를 연결하는 새로운 전략의 등장은 프랑스 근대 국가 건설에 핵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 Michel Foucault, “Governmentality,” in Colin Gordon et al, *Foucault Effects: Essays on Government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19) 세가 프랑스 학계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정치 경제학(économie politique) 교수직을 얻은 후 이 직위는 광의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로시(Pellegrino Rossi)에게 이어졌으나 1841년에는 생시몽주의자인 세발리에(Michel Chevalier)에게 넘어가게 되며 1916년 르루와-볼리외(Paul Leroy-Beaulieu)를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학 교수직 자체가 없어진다.

20) 미셸 푸코, 오토르망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8-79년』(난장, 2012), 69. 물론 이 통제는 “더 많은 자유를 도입시키는 기능” 역시 가지고 있었다. 같은 책, 108.

21) 같은 책, 75.

이 작업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역시 기조(François Guizot)였다. 기조는 프랑스 혁명의 정치적 성과를 근대 국가로 이행시키기 위한 고민에서 “이성의 주권(sovraneté de la raison)”의 개념을 도출했다.

나는 신권도 인민 주권도 ... 믿지 않는다. 나는 이런 개념이 권력의 찬탈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는 이성과 정의와 법의 주권을 믿는다. 세계가 발견해 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발견할 정당한 군주가 여기에 있다. 이성이나 진실, 정의가 완전하거나 오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한 인간이나 인간의 모임도 이들을 소유할 수 없다.²²⁾

그는 인민 주권이 대표하는 대혁명의 정치적 성과와 왕권 신수설이 대표하는 왕정 복고기의 반동을 모두 거부하면서 교조적 자유주의(Doctrinaire liberalism)를 주장한다. 그는 모든 종류의 압제를 거부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와 궤를 같이 하지만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변별된다.

기조는 인간의 이성이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천부적인 참정권의 부여는 합리적인 “통치(gouvernement)”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조는 당대 프랑스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쿠쟁(Victor Cousin)의 이성, 즉 초월적이며 외부적인(extérieure)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를 중심으로 하는 교조주의 그룹은 나아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조차 “거부할 수 없는 이성의 손(irrésistible main de la raison)”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결정적으로 분기한다.²³⁾ 그의 자유와 이성에 대한 관점은 “전통적인” 자유주의가 19세기 초중반에도 여전히 전통적이거나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그가 개인의 정치적인 권리에 근거한 대혁명의 정치적 성과를 단일하며 이성적인 “사회적 일관성(cohérence sociale)”에 의한 주권과 그에 따른 통치로 대체하려 했다는 점을 암시한다.²⁴⁾ 기조는 국가가 바로 이 “이성의 주권”을 담지하고 실행하는 과학적이며 사회학적 존재라고 상상했다. 기조는 국가와 사회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사회의 우월성을 전제로 국가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성을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한 것이다.

기조가 말한 “이성의 주권”의 사회적이며 과학적인 표현 형태는 통계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사회 조사(enquête sociale)” 방법론이었다.²⁵⁾ 특히 뒤

22) François Guizot, *Du gouvernement de la France depuis la Restauration et de Ministère Actuel* (Ladvoat, 1820), 201.

23) Félicité Robert de Lamennais, *Progrès de la Révolution et de la Guerre contre l'Église* (Paris, 1829). 쿠쟁과 기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Jan Goldstein, *Post-Revolutionary Self: Politics and Psyche in France, 1750-185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참조.

24) Guizot, *Du gouvernement*, 27; Pierre Rosanvallon, *Le Moment Guizot* (Paris: Gallimard, 1985), 88-92.

25) 물론 이 시기 다른 다양한 사회학 기획들 역시 “이성의 주권”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콩트는 기조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치학과 도덕 과학(science morale)”에 관한 잡지 창간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Paulo de Berrêdo Carneiro, Pierre

샤틀레(Alexandre Parent du Châtlet)의 □ 공공 위생과 도덕, 행정과의 관계에서의 파리의 매춘□ 과 빌레르메(Louis-René Villermé)의 기념비적인 사회학 연구서 □ 면방, 양모, 견직 공장의 노동자들의 생리학적 · 도덕적 상태에 관한 묘사 □ 를 대표로 하는 사회 조사 방법론의 태동은 이성의 주권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구현하는가에 대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뒤 샤틀레와 빌레르메는 모두 의학이라는 공통의 과학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문제에 병리적으로 접근했다. 특히 빌레르메는 군대에 있던 시절부터 전염병학(epidemiology)과 공공 위생(public hygiene)의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며 사회 경제학적 환경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갔다.²⁶⁾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이 지적하듯 통계를 사용한 사회 조사 방법론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가시성을 생산하여, 사회적 영역의 불투명성을 국가에게 명백히 밝히” 는 작업이었다.²⁷⁾ 사회 조사 방법론을 기초로 한 사회학적 기획이 가난이라는 문제의 특질을 재정의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빌레르메는 가난의 문제를 부도덕함과 비위생/전염병 사이의 비례 관계로 변환하면서 비위생성 자체가 부도덕함의 상징이며 표지라고 주장하게 된다. 나아가 그는 비위생적인 환경은 그 환경의 주체인 인간의 부도덕함을 보여주고, 이런 물리적인 비위생성이 다시 부도덕함을 낳는다고 정의한다. 빌레르메의 논지는 1960년대 사회학에서 등장한 “가난의 문화,” 즉 가난이 악덕을 낳고 악덕이 다시 가난을 재생산하는 악순환과 거의 동일하며 따라서 동어반복적인 이데올로기적 설명에 불과하다.²⁸⁾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푸코의 표현을 빌자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가 되도록 만드는 … 특정한 진실의 체계” 에 집중하면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²⁹⁾ 사회 조사가들의 작업은 현실 자체의 재현이기도 했지만 특정한 시선에서 이해한 현실의 생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삶의 특정한 조건들이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그 경제적 결과가 다시 삶의 조건을 생산하는 순환은 그 기술에 담긴 도덕적 함의와 상관없이 사회적 삶과 사회적 사실(le fait social)을 생산하게

Arnaud et al eds., *Auguste Comte: Correspondance générale et confessions*, tome I (Paris: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1973), 92.

26) Parent du Châtlet, *De la prostitution dans la ville de Paris,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hygiène publique, de la morale et de l'administration* (Paris: J.-B. Ballière, 1836); Louis-René Villermé, *Tableau de l'état physique et moral des ouvriers employés dans les manufactures de coton, de laine et de soie* (Paris: Jules Renouard, 1849).

27) Pierre Rosanvallon, *L'état en France de 1789 à nos jours* (Paris: Seuil, 1992), 43.

28) Oscar Lewis, “Culture of Poverty,” in Daniel Moynihan ed., *On Understanding Poverty: Perspectives from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Basic Books, 1969), 187-220. 이에 대한 중요한 반박으로는 Judith Goode and Edwin Eames, “An Anthropological Critique of the Culture of Poverty,” in George Gmelch, Robert Kemper, and Walter Zenner, eds., *Urban Life: Readings in the Anthropology of the City* (New York: Waveland Press, 1996) 참조. 이와 관련된 빌레르메에 대한 비판으로는 William Coleman, *Death Is a Social Disease: Public Health and Political Economy in the Early Industrial Franc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2), 239-241 참조.

29) 미셸 푸코, □ 생명정치의 탄생□, 45.

된다. 물론 공공 위생 개혁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빌레르메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 계급 전체를 안정화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며, 푸코가 생명 정치(bio-politique), 특히 해부학적 정치(anatomo-politics)라고 부른 영역의 문제 의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특정한 행위의 유도(conduire de conduit)로, 즉 자유주의 통치성(liberal governmentality)으로도 기능했다.³⁰⁾ 즉 공중 위생과 그 경제적 결과에 대한 지식 생산은 일종의 훈육 기제(disciplinary mechanism)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특정한 종류의 진실 체계를 통해 개인 행위 자체의 합리성을 부과하는 역할 역시 수행한 것이다.

7월 왕정의 시기에 자유주의 경제학이 완전히 퇴조했다는 것은 아마도 과장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 이 시기 사회와 경제, 부와 가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수렴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과학 방법론으로 분화했다. 이 분화는 경제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다각화된 것으로 단순히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경제학이 통치성과 맺고 있는 불편하고 때론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자유주의 경제학 지식이 시민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과 우위를 뒷받침하고 있었다면 근대 국가가 담지한 통치성은 그 자기 조절적인 사회를 어떻게 통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기조가 주장한 “이성의 주권”과 이를 대변한 통계학적 사회 조사 방법론은 근대 국가의 다양한 장치를 자본주의적 시민 사회에 배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 다양한 장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마음의 관리를 통한 통치(gouverner par le maniement des esprits)”라는 점에서 통치성의 실현이었다.³¹⁾

다만 이 시기의 자유주의 통치성은 “인구 현상”이라는 통치성의 근본적인 대상, 즉 인구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접근만을 수행했다. 공중 위생을 통한 훈육의 기제는 푸코가 말한 해부학적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할 인구 정치(population politics)는 여전히 통치성의 영역에도 경제학 지식의 영역에도 포섭되지 않았다. 따라서 1848년 이후 경제학 지식의 전개에서 인구 현상의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떠오르게 된 사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 인구의 개입과 “사회적 문제” : 국민-사회 국가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근대 국가의 정의로 “국민-사회 국가(l'État national-social)”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³²⁾ 이 정의는 모든 공동체가 직면하게 되는 포섭과 배제의 동학이 근대 국가의 시기에 이르러 두 층위, 즉 국민/민족(nation)이라는 상상의 기제와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 기제의 층위에서 전개되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즉 “사회 국가”는 “사회 정책이 정착되고 국민적 틀 속에 말하자면 녹아들었으며, 그리하여 국민에 소속되는 것이

30) Foucault, *Dits et écrits*, tome. IV (Paris: Gallimard, 1994), 237.

31) Rosanvallon, *Le Moment Guizot*, 223.

32) Étienne Balibar, *We, the People of Europe: Reflections on the Transnational Citizenship*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68-69.

사회적 권리들을 향유하기 위한 본질적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역으로 이런 사회적 권리들에 대한 인정(이런 인정의 원리는 이제 헌법 속에 명문화되어 있다)은, 그런 인정이 힘을 중심으로 하고 국민 주권을 긍정하는 정치 속에 구현되"는 형태의 국가를 의미한다.³³⁾ 물론 발리바르는 이런 종류의 국가의 탄생을 20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지만 그 초기적 형태는 1848년 혁명 시기부터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848년 혁명이 노동권과 사회 보조권을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마라(Armand Marrast)와 코르메넵 자작(Vicomte de Cormenin), 바로(Oldion Barrot), 토크빌, 심지어 공상적 사회주의자 콩시데랑(Victor Considérant) 등의 혁명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헌법 초안 위원회는 노동권과 사회 보조권을 인정하는 구절을 제2공화국 헌법 초안에 포함시켰다. 초안의 제2조는 개인이 갖는 권리의 내용을 "자유, 평등, 안전, 노동, 재산과 [공적] 보조"로 정의한다. 이 적극적,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이 남긴 유산은 대단히 복잡하다. 한편으로 이 권리의 인정은 헌법 비준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과 양보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대한 이해와 대책을 결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시켰다. 반면, 두 사회적 권리에 대한 형식적인 인정은 자유주의 경제학, 또 이와 연동된 "이성의 주권" 전략의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1848년의 혁명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사회 개혁을 주장해야 했다. 따라서 자유주의 경제학의 입장은 대단히 수세적인 것이었다. 게으름(oisiveté)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더 이상 효과적일 수 없었고 "사회적 문제" 해결은 혁명의 맥락에서 더욱 긴급해졌다. 그러나 드 멜렌(Armand de Melun)의 표현대로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가 "헌법의 몇 줄"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문제"는 근원적이면서 자연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내포한 문제였다.³⁴⁾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경제학 지식 체계는 사회 조사 방법론을 떠나 거시 경제학적으로 가난의 문제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런 필요의 가장 징후적인 국면은 맬서스의 재발견이었다. 이미 초기 프랑스 산업화 과정은 적절한 경제 성장이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의 성장을 동시에 가져오리라는 프랑스 자유주의 특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먼저 19세기 초중반 프랑스 전체 인구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때 도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제 도시 빈민은 "사적 자선이나 때때로 행해지는 공적 부조의 대상인, 잘 정의되지 않는 소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위험한 문제로 등장했으며 이 "위험"은 혁명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³⁵⁾ 자유주의 경제학과 사회 조사 방법론의 결합으로 등장한 "도덕 경제학자(economistes morales)" 집단은 먼저 도시 인구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인구라는 문제에 접근했다.³⁶⁾ 1851년 그륀(Alphonse Grün)은 맬서스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33)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옮김, □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2011), 136.

34) Armand de Melun, *De l' Intervention de la Société pour Prévenir et Soulager Misère* (Paris: Plon, 1849), 24-25.

35) Coleman, *Death Is a Social Disease*, 57. 대중의 이미지에 관한 탁월한 연구 성과로는 Susanna Barrow, *Distorting Mirrors: Visions of the Crowd in the Late Nineteenth-century Fr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를 들 수 있다.

36) 도덕 경제학은 당시 사회 과학 분과 학문의 지식 주장을 모두 종합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노동자들이 어린 나이에 너무 쉽게 결혼하는 선견지명의 부족(imprévoyance)”을 경계할 것을 요구한다.”³⁷⁾ 도시 빈민의 이미지는 노동 계급 자체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아가 “공공 위생적”으로 “위험한 계급(Classes dangereuses)”으로 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조사 방법론의 영향력을 보여주시고 하지만 가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군중(mass)”의 이미지와 결부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³⁸⁾ 이 맥락에서 인구라는 범주를 핵심으로 하는 맬서스의 재발견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맬서스주의 재발견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맬서스가 자유주의 경제학 체계 내에서 가난에 대한 거시 경제학적 설명을 제시했다는 데 기인한다. 이 새로운 이해 방식은 이전 사회 조사 방법론의 도덕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제2제정기 프랑스 자유주의 경제학자 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로시(Pelligrino Rossi)는 맬서스의 □ 인구론□의 재간행을 축하하면서 맬서스 경제학을 재평가할 것을 장려한다.³⁹⁾ 중농주의 신화, 즉 인구 자체가 국부와 동일하다는 신화가 붕괴하면서 생산은 단순한 인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노동자 군(群)의 크기와 생산성에 달려 있다고 상정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적 악덕의 원인은 “한 가족의 가장의 범죄적인 선견지명의 부족(imprévoyance)”에서 찾을 수 있다.

⁴⁰⁾ 라베르뉴(Leonce de Lavergne) 역시 “인구 증가 자체가 사회의 병증은 아닐지 몰라도 … 맬서스가 그의 놀라운 주장으로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보조를 받아야 할 권리이다 … 노동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는 생산의 총량을 감소시켜 가난의 총량을 증대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⁴¹⁾ 맬서스주의와의 결합과 더불어 도덕 경제학은 “의무(devoir)”의 용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사뭇 모순적으로 들리는 “개인으로 말하자면 [공적] 보조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불행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는

자유주의 경제학과 사회 조사 방법론에 더불어 생시몽주의의 마지막 계승자인 셰송(Émile Cheysson)과 민족지(ethnography) 방법론의 선구자인 르 플레(Frédéric le Play),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늦지만 타르드(Gabriel Tarde)를 중심으로 한 조합 주의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도덕 경제학의 기치 아래 존재했다. 물론 이런 종합은 사회주의 경제학이라는 강력한 타자의 등장과 관련이 있지만 당시 도덕 경제학이 가진 학문적 중요성을 증거하기도 한다.

37) Alphonse Grun, *De la Moralization des Classes Laborieuses* (Paris, 1851), 22.

38) 로장발롱은 정치적으로는 평등하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중의 순전한 규모가 이미 7월 왕정의 지도자의 가장 큰 공포이며 고민이었다고 주장한다. Rosanvallon, *Le Moment Guizot*, 75-82. 이런 이미지의 측면에 더하여 혁명 직전인 1845-1846년 사이의 흉작이 일으킨 소(小) 공황과 이에 따른 인구 변동은 맬서스주의로의 전환을 더욱 부추겼다. 1845년의 인구 증가는 240,000명 정도, 즉 전체 증가율로는 6.9%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대흉작의 여파로 1847년의 인구 증가는 52,000명, 즉 1.5%에 머물렀다. 이런 분석은 인구 변동의 추이가 실제 식량 생산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André Armengaud, *La Population Française aux XIXe sièc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1971), 21-33. 많은 프랑스 인구 학자들은 이 시기를 프랑스 인구 감소(dépopulation)의 시작으로 본다.

39) Pelligrino Rossi, “Introduction,” *Du Principe de la Population* (Paris: Guillaumin, 1852), xxxv.

40) Ibid., xxxvii.

41) Leonce de Lavergne, *L' Agriculture et la Population en 1855 et 1856* (Paris: Guillaumin, 1857), 304-306. 강조는 원저자.

있으며 이 의무는 국가에게로까지 확대된다” 는 언명이 그것이다.⁴²⁾

하지만 맬서스의 가장 근원적인 통찰 중 하나는 인구가 경제 성장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이었다. 인구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맬서스는 “영원한 성장(perpetual growth)” 을 반박하고자 했다. 하지만 프랑스 도덕 경제학은 인구가 경제 성장에 가하는 제한을 단순히 생산성과 인구 사이의 일시적인 괴리로 해석하고 성장 자체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강화했다.⁴³⁾ 따라서 맬서스주의는 가난의 문제에 대한 급진적 해결책에 대한 처방에 불과했고 “성장의 한계” 에 대한 통찰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회적 시민권이 대표하는 정치적인 차원을 배제한 경제학 지식이 제시할 수 있는 가난에 대한 해결책은 “영원한 성장” 뿐이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역설적인 지점은 맬서스주의의 유입이 어느 정도 완결되는 시점인 1860년대부터 프랑스 인구 성장의 둔화가 분명해졌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엄밀한 거시 경제학적 차원에서 맬서스주의는 인구 현상에 대한 인구의 감소가 가져오는 노동력과 생산성의 감소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상쇄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구 감소(dépopulation)—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건 통계적 착시이건 정서적인 집착이건 간에—가 공적 영역의 주요 주제로 올랐을 때 맬서스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의 인구 감소에 대한 담론이 성행하면서 이는 현실이 되었다. 노동 총량의 부족이 이슈가 되는 사회에서 성적 절제를 그 핵심으로 하는 “미덕” 즉 선견지명이 운영 원칙인 사회 정책은 더 이상 그 생존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더구나 마침내 권력의 지형이 완전한—최소한 성인 남성에게 대해서는—민주주의로 이행한 체제는 더 이상 “사회적 문제” 의 핵심적인 내용인 정치적 평등 하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수사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⁴⁴⁾

따라서 제3공화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강베타(Léon Gambetta)의 1871년 선언, 즉 “사회적 공화국(la République sociale)을 건설해야 한다” 는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했다.⁴⁵⁾ 즉 강베타의 언명은 1879년부터 제기되어 온

42) Rossi, “Introduction,” 180, 192, 287. 물론 대혁명 이래 많은 이론가들이 “권리의 의무화” 를 이야기 해왔으나 맬서스로의 전환 이후 이 변환은 큰 의미를 지닌다. 보드리아르(Henri Baudrillard)는 심지어 “공적 자선은 필요하” 지만 “이 필요, 그 존재 이유(raison d’ être)가 그 한계로 작동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는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자유와 국가 권력의 한계라는 문제” 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Henri Baudrillard, *De la Morale et de l’ Économie Politique* (Paris: Guillaumin, 1860), vi.

43)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영원한 성장” 에 대한 믿음은 프랑스 정치 경제학의 특수한 성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아담 스미스는 이런 종류의 성장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도덕적 감정의 이론(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스미스는 인간 행위의 준거를 국민부론(Wealth of Nation)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기심이 아닌 동정심(sympathy)에서 찾는다. 이 윤리적인 지향이 그로 하여금 이기심에 의해 추동되고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장하는 “영원한 성장” 을 회의하게 한 것이다.

44) 경제학 지식 내부에서 맬서스주의가 붕괴하고 인구주의가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Yves Charbit, *Du Malthusianism au Populationnisme: Les économistes français et la population, 1840-1870*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1); Kyunghwan Oh, “Republican Duties: Depopulation, the Social Question, and the Rise of the Welfare State in France, 1870-1914”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2007)

45) 물론 “사회적 공화국” 의 언명 자체는 1848년에 그 기원을 두고 조레스(Jean Jaurès)까지 이어진다.

사회적 시민권을 선언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제3공화국에서 가난과 “사회적 문제” 는 한층 더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다. 제3공화국 정부는 스스로를 프랑스 혁명의 적자로 규정하면서 혁명의 정치적인 의제를 실현시키는 것을 시대적 과제로 삼았으며 사회적인 제반 여건도 “사회적 문제” 의 심각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경향은 심화되고, 최초의 중앙 노조인 노동 연합(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역시 결성되었다. 따라서 제3공화국 정부의 목표는 이러한 자본-노동의 양극화 현상 안에서 “사회적 평화(la paix sociale)” 를 이뤄 내는 것이었다. 그 결과 “사회적 문제” 는 그 존재 여부가 더 이상 학술적으로 논의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뒤르캥의 용어를 빌자면, “사회적 사실(le fait social)” 이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구 현상의 개입은 결정적이었다. 인구 감소 담론은 이런 공화주의적 사회 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 시기 사회 개혁은 넓은 정치적 분포 속의 정치 세력을 설득해야만 했다. 이런 설득은 물론 “사회적 문제” 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에서 출발한다.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문제” 가 해결되어야만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강한 프랑스의 재건이 가능하다는 데에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 극단을 제외하고는 동의하는 바였다. 물론 이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은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게 했다. 자유주의자들의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것이었다면 사회주의자들의 해결책은 혁명이나 이에 준하는 변화였고 보수주의자와 왕정주의자들에게는 전통으로의 복귀였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 의 해결을 사회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공화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필요했던, 이미 절대적인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는 문제인 인구 현상은 정치적 촉매의 역할을 수행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귀결은 경제학 지식과 근대 국가가 서로를 생산하는 장치(dispositif)의 중요한 한 방식을 보여준다. 분명 “사회적 문제” 는 프랑스라는 맥락에서 가난이라는 보편적인 현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혁명의 전 사회적 위기가 가져온 정치적 각성은 삶의 근본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였던 빈곤의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게 만들었다. 근대적인 주권의 탄생과 그 주권을 담지한 자로서의 시민의 탄생, 또한 경제적 사회 조직의 변화와 맞물려 구체화된 가난은 프랑스 경제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즉 프랑스에서의 국가 형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규정했다. 반대로 프랑스에서의 근대 국가 형성 과정 역시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된 “사회적 문제” 에 대한 인식을 떼어놓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근대 국가로의 발전 과정이 “사회적 문제” 의 이해와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리바르의 “국민-사회 국가” 는 이 복잡한 공생산의 한 역사적 배치를 보여준다.

5. 결론

프랑스에서 경제 현상에 대한 지식은 “사회적 문제” 로만 규정할 수 있는 특정한 문제 의식, 즉 “정치 문제” 로도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 로도 규정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경제학 지식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 과학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재의 현실에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진다. 프랑스에 수입된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 맬서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은 “사회적 문제” 라는 필터를 통해 이해되고 이식되었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 가 제기하는 현실적 문제는 다양한 종류의 다른 사회 과학 지식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콩트의 유기체적 사회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법칙적(nomological) 사회학과 빌레르메와 퀘텔레(Quetelet)를 중심으로 한 통계적 방법론과 사회 조사 방법론, 르 플레의 사회 조사 방법론, 이들을 종합하면서 지양하려고 했던 뒤르캥과 그 사회학 연감(Année Sociologique) 그 그룹 등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문제” 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 지식” 은 19세기 내내 이들 지식과의 끝없는 경쟁—지적·제도적·사회적 차원에서—을 치러야 했다. 물론 자유주의 경제학 지식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계급적 차원 뿐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와 자본의 집중, 식민 제국의 확대 등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이데올로기적 중요성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⁴⁶⁾

하지만 프랑스에서 경제학 지식, 특히 현재의 주류적 자유주의 경제학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외부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문제” 를 둘러싼 담론 투쟁에서의 패배—혹은 완전하지 못한 승리—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경제학 지식 자체의 내부적인 변환, 심지어는 내파(內破)를 의미하기도 했다. 즉 프랑스에서의 경제학 지식은 계보학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도덕, 선견지명(prévoyance), 의무(devoir) 등—를 추가함으로써만 “사회적 문제” 에 대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했고, 이 요소들은 경제학 자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적 모순을 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점에서 순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경제학 지식이 과연 존재했는가하는 의문 역시 적절하다. 아담 스미스 이래의 영국적 자유주의 고전 경제학조차 이질적인 실천의 합으로써만 존재했다.⁴⁷⁾ 다만 이러한 전개는 경제학이라는 사회 과학의 역사를 내부적인 이론 보완의 역사가 아니라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담론성이 복잡하게 얹히고 서로를 전유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더구나 제3공화국 이후의 “인구 감소” 라는 담론의 등장은 그간 자유주의

46) 이 시기 프랑스 경제 발전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로는 다음 참조. J. Bouvier, F. Furet, et M. Gillet, *Le Mouvement du Profit en France au XIXe siècle* (Paris: Mouon, 1965); R. Poidevin, *Les Relations économique et financière entre la France et l'Allemagne de 1898 à 1914* (Paris: Armand Colin, 1969). 뒤르캥이 소르본느(Sorbonne)에 사회학으로 석좌 교수에 취임한 것은 1902년에 이르러서이며 그의 사후 1931년이 되어서야 마르셀 모스(Marcel Mauss)가 콜레주 드 프랑스에 다시 사회학 석좌 교수에 오른다. 프랑스 경제학은 기관지인 그 경제학 저널(Journal des Économistes)을 출판하던 귀요맹(Guillaumin)을 중심으로 한 출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건설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1910년 귀요맹은 사회학자들의 기관 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 펠릭스 알칸(Félix Alcan)에 의해 합병되고 이는 프랑스에서의 자유주의 경제학의 몰락을 암시했다.

47) 이 문제에 관한 탁월한 저작으로는 Emma Rothschild, *Economic Sentiments: Adam Smith, Condorcet, and the Enlighte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를 들 수 있다.

경제학의 암묵적인 전제였던 “영원한 성장” 을 완전히 해체했다. 이에 뒤이어 등장한 것은 다양한 사회 정책의 모호하고 내부적으로 모순적인 집합이었다. 여기에서 이들의 추이를 모두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사회적 문제” 와 “인구 감소” 의 화학적 결합이 프랑스 특유의 복지 국가 형성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 모호한 실천이 일으킨 정치적이며 지성적인 양상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화의 시기까지 프랑스에서의 자유주의 경제학이 갖는 불안한 위치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불안일 뿐 경제학 지식 체계 전체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피케티(Thomas Piketty) 현상은 오랜 프랑스 경제학 지식 내부의 경합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편으로 피케티는 “사회적 불평등은, 그것이 정당화되지만 한다면, 다시 말해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 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적 차별이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두는 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에 대한 오랜 관심을 새로운 맥락에서 반복한다. 나아가 그는 “경제학 분야는 아직도 역사적 연구 및 다른 사회 과학과의 협력을 등한시하면서 수학에 대한, 그리고 순전히 이론적이고 흔히 이념적인 고찰에 대한 유치한 열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 고 이는 “과학성의 겉치레” 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의 학문이 갖는 역사적 유산에 대한 무의식적인 계승을 선언하고 있다.⁴⁸⁾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케티의 선언은 불평등 자체와 사회적 시민권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논쟁을 “공익” 이라는 그리 새롭지 않은 정치적인 수사로 가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20세기 내내 경제학 지식은 “공익” 의 계산과 생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기 때문이다.

(투고: 2015년 11월 12일, 심사 완료: 2015년 12월 10일, 게재 확정: 2015년 12월 11일)

48) 토마 피케티, 장경덕 옮김, $\square$ 21세기 자본 $\square$ (글항아리, 2014), 45-46.

Poverty, Liberty, Population: The Co-production of Economic Knowledge and the Modern State in Nineteenth-century France

OH Kyunghwa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deconstruct the history of economics in nineteenth-century France into a discursive history of mutual dependence of knowledge production and social practices. The Revolution of 1789 granted, albeit limitedly, political rights and raised the issue of economic inequality, the imbalance of which is encapsulated in the concept of the “social question.” The liberal economic response to this was the moralization strategy, whereby the ultimate responsibility was transferred to individuals. During the Restoration years, neither liberal economic regime nor governmentality were consolidated, resulting in a weak modern state. During the July Monarchy, scientific research on society, economics, and wealth was diversified into a variety of “social scientific” endeavors. While the rediscovery of Malthusianism rekindled liberal economics briefly in the Second Empire, the intervention of the population phenomenon known as “depopulation” completed the transition to “national-social state.” This history testifies to the co-production of two central *dispositifs*, economic knowledge and the modern state.

Keywords. social question, sovereignty of reason, Malthusianism, governmentality, national-social state